

내년 우유 군납 250㎖ 그대로

내년 군납 우유 용량은 250㎖가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국방부에서 검토됐던 가공우유 급식도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2월 3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급양관계관 회의에서 2013년도 군 급식방침 및 급식기준량 토의결과 2015년 2월15일까지는 250㎖ 현행유지가 결정됐다.

국방부는 정부정책을 고려하고 사전예고 없이 조정할 경우 낙농가와 농협시설 투자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현행유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납 백색시유 용량은 2015년 2월16일부터는 용기를 200㎖로 조정기로 했다. 250㎖에서 200㎖로 용기를 줄이는 대신 급식회수는 365회에서 456회로 91회 늘려 총 공급량은 현행대로 유지기로 했다.

특히 우유배급 시간을 현재 아침식사 때에서 오후 간식시간에 빵과 함께 제공해 장병들의 우유섭취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소개됐다.

그동안 선호도 문제로 검토됐던 가공우유 급식은 군장병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우유 식습관을 위해 공급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군납 쇠고기의 경우 한우 13g, 육우 9g, 수입쇠고기 9g으로 급식기준량을 정했다. 급식량 증가가 필요하지만 재원부족으로 현행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입쇠고기 급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168억원 예산 증액의 경우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부식 70%, 후식 30%로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 증액시 수입쇠고기 9g을 전량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협은 국회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예산증액 시 국내산 쇠고기 대체에 우선 배분한다는 부대 의견을 명시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다.

내년 축사현대화사업자 조기 지원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 대상자에 대해 조기 지원을 실시기로 했다. 올

해 보조와 융자 형태로 지원받은 전업규모 미만 양축농가에 대한 집행률 저조로 인해 약 1천200억원의 현대화사업 예산이 불용, 내년도 예산삭감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현대화사업 신청 농가 중 조기 사업 추진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 집행률을 끌어올려 예산삭감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현대화사업 집행을 제고를 위한 관련지침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현대화사업은 자금지원 방식을 변경,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방식은 전업규모 이하 농가가 대상으로 올해 2천760억원, 이차보전방식은 전업규모 이상 농가가 대상으로 2천125억원을 각각 배정하는 등 올해 총 4천885억원의 예산을 책정한바 있다.

배합사료생산량 역대 최대

국내 사료생산량이 연간 1800만톤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2월 14일 한국사료협회와 배합사료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료생산량은 1,681만4,669톤으로 동기간 누계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연간 생산량 1,800만톤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돈과 한우를 중심으로 구제역 이후 사육마릿수의 회복이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료 생산량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 사료 생산량은 11월말 기준으로 양돈 514만1,939톤, 비육 467만696톤, 육계 194만6625톤과 산란계 184만8171톤 등 양계 441만6464톤, 낙농 121만9497톤, 기타 136만6073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기상이변으로 급등했지만 환율이 안정되면서 업계의 충격이 어느정도 완화 됐었다곤 해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의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내년

초부터 사료업계는 물론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생산성 향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컨트롤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산정체계 개선 논의 재점화

유단백을 포함시키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 11일 2012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원유가격 협상과 FMD로 인해 2여년간 중단됐던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위원회의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총복낙협 신평우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생산자측 이사 2명과 수요자측 이사 2명 등 5명으로 운영기로 했다. 소위원회에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을 도출되면 이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상정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지난 2008년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실무작업반, 소위원회를 거쳐 2009년 2월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용역은 2010년 10월에 최종 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7개 시안 중 최종 3개시안을 선정해 지역설명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2011년도 기본원유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 개시와 전국적으로 발생한 FMD로 인해 중단된 이후 2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기간 중 기본원유가격이 인상됐으며 체세포 2등급의 인센티브 상향조정에 따라 인센티브의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 연구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기본원유가격 인상 이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분석했으며 이 결과를 놓고 향후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원유 품질, 저지방·고단백 중심으로 좋아졌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최근 4년간 원유품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1년간 원유검사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은 지난 2009년까지 추진되다 FMD(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으며, 올해 들어 관련 논의가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상태. 당시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적인 개편방안은 도출된 상태지만, 그동안의 여건 변화로 인해 개편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전체 낙농가 중 75% 가량(4525농가)의 원유검사성적 표본데이터를 중심으로 최근 1년간(2011년 9월~2012년 8월)간 원유품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근 열린 이사회에 보고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원유가격 산정체계 연구용역 당시 표본데이터였던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원유품질과 최근 1년간의 원유품질이 큰 변화를 보였다.

우선 유성분 중 유지방 평균성적이 2008년 4.04 보다 0.07 포인트 하락한 3.97로 나타났으며, 유단백 평균성적은 2008년 3.10 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3.20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35.4%에 불과했던 유단백 3.2 이상 비율이 67.4%까지 상승해 저지방·고단백 중심의 사양관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었다.

다만 체세포수는 지난해 2등급 인센티브 상향조정 이후 1등급 비율이 2008년 59.0%에서 최근엔 48.0%로 11.0%p 감소했고, 2등급 비율이 2008년 29.2%에서 39.4%로 1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번 분석 결과를 반영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최근 원유검사성적 변화에서 알 수 있듯 이미 농가의 사양관리가 저지방·고단백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논의를 내년 3월까지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품 수입량, 국내 생산량 바짝 따라잡다

유제품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바짝 따라잡으며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12월 18일 한국유가공협회에 따르면 1991년 이래로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지난해 70.7kg으로 최고치로 나타났다. 20여년 사이에 43.2kg에서 약 1.7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유제품 소비량도 359만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이 늘은 반면, 생산량은 오히려 최근 20년 새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 것. 특히 유제품 생산량은 189만으로 1993년 수준과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정점을 찍었던 10년 전인 2002년 253만 대비 약 25% 폭락한 수준. 유제품 생산량은 199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02년을 기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주목할 점은 유제품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수입량(171만)은 50.9%나 증가해 2011년에는 생산량과 수입량이 비슷한 수준에 다다른 것.

유업계 관계자는 “우유 판매량은 최근 5년 동안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전년 대비 크게 줄거나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우유를 활용한 2차 가공품을 제조한 틈새시장 전략이 필요한 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정체인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도 우유를 잘 섭취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대 인상시 제품값 반영 놓고 갈등 불가피

올해 치열한 협상을 거쳐 원유가격 연동제에 합의했다. 3~4년을 주기로 홍역을 치러야 했던 원유가격 협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낙농가들로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가격연동제에 합의했다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 농가와 유업체의 줄다리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남아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이상 생산비가 오르면 이를 원유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 원유가격 연동제의 골자다. 유업체 입장에서는 원유가격을 인상하는 만큼 제품가격에 반영토록 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유제품의 경우 정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가격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유제품가격 인상 없이 원유가격이 오르게 되면 인상분만큼을 유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유제품가격 인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유업체에서 가격연동제에 순순히 따르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올해 어렵게 원유가격 연동제에 합의했지만 솔직히 시행 첫해인 2013년에 바로 안정적으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선 유업체의 입장에서 제품가격 인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가격연동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생산비 상승 요건이 제대로 반영될 지도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낙농가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가격연동제인 만큼 안정적으로 도입,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

